

대학 구조개혁의 성공조건



조 무 제
경상대학교 총장

한 국가의 경쟁력은 그 나라의 대학경쟁력에 비례한다고 한다. 이는 대학이 미래의 국가산업을 이끌어 갈 연구개발(R&D)의 산실임과 동시에 인적자원 개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세계 초일류 강국인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의 원천은 미국 대학에서 창출되는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력과 우수한 인력에서 기인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대학은 국력에 걸맞은 국제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2004년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인구 2천만 명 이상 OECD 30개국 중 28위로 평가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은 최근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 교육시장 개방, 대학 졸업생들의 심각한 취업난 등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 대학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기개혁 노력과 정부당국의 획기적인 대학지원 정책이 맞물려야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8월 3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대학 총·학장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로 ‘대학 혁신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대학을 살리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시안의 핵심은 첫째 대학의 통·폐합 등을 통하여 대학 입학정원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둘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로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며, 셋째 대학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신입생들에게 자유로운 대학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원 감축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들의 대폭적인 정원 감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각 대학은 획기적인 정원감축과 더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각 대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몇 개 분야를 특성화시킨다면 한국의 대학도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특성화된 대학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는 세칭 일류대학으로만 몰리는 학생들의 편중현상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이와 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해 각 대학들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소의 이견이 있으나 대학 구성원 대부분은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대학 수가 가장 많은 나라임과 동시에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도 약 80%로서 미국의 65%에 비해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 대학 수는 전문대학을 포함해 357개교에 입학정원은 65만 명에 이른다. 이에 비해 고교졸업생은 2003년에 59만 명이던 것이 2021년에는 43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2009년까지 국립대 1만 2천 명, 사립대 8만 3천 명 등 신입생 정원 9만 5천 명 감축은 이미 2004학년도에 지역소재 대학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허수 감축에 불과하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원 감축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들의 대폭적인 정원 감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각 대학은 획기적인 정원감축과 더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로 대학의 경쟁

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이 199개교가 있지만 각 대학의 특성을 살려 특성화된 대학은 많지 않다. 매년 미국에서 발표되는 각 대학들의 평가결과를 보면 하버드대학교나 스탠포드대학교라 할지라도 모든 학문분야에서 세계 최고이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서울대학교부터 모든 학문분야에서 국내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적어도 몇 개 분야에서라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대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각 대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몇 개 분야를 특성화시킨다면 한국의 대학도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국내 몇몇 대학에서 입증되고 있다. 아울러 특성화된 대학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는 세칭 일류대학으로만 몰리는 학생들의 편중현상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학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다.

OECD국가의 고등교육예산은 GDP 대비 평균 1% 수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0.43%에 비해 2.3배나 된다.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

“

대학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최근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GDP 대비 약 0.52%에 해당하는 내국세의 4%를 고등교육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당국은 확실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 대학이 효율적인 구조개혁을 통하여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조속한 입법을 통한 획기적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

규모는 미국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주립대학과 비교할 때 약 10% 정도이다. 최근 12개 대학의 통폐합을 완료한 일본의 경우 구주대학 캠퍼스 이전에 2조 5천억 원을 투입했으며, 중국의 저장대학 통합에도 약 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최근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GDP 대비 약 0.52%에 해당하는 내국세의 4%를 고등교육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당국은 확실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9월 14일 발표한 정부의 중장기(2004년~2008년) 재정운용 계획에 의하면 복지·노동분야와 국방분야의 연평균 예산증가율을 각각 12.2%,

9.9%로 가장 높게 잡은 대신 교육예산 증가율은 7.8%에 불과했다. 경제전문가들도 미래 성장 잠재력과 직결되는 교육예산이 낮게 반영된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모처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학 구조개혁 및 경쟁력강화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공약에서 고등교육예산규모를 OECD국가들의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학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 대학이 효율적인 구조개혁을 통하여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하여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학교육**